

재정난에 비틀대는 私學교육

세미나 - '사학재정난 해소방안의 모색'

국가 재원증에 인력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예산부터 인력사회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져 왔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우수한 인력들을 사회에 배출시키기 위해 교육을 국가의 큰 과업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국가의 교육적 공공성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립대학 외에도 사학재단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사립대학이 있다. 교육열 세계 제1위의 한국은 4년제 대학 1백5개 중 사학이 75%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많은 인력재원이 몰려있는 사학은 항상 재정난에 부딪혀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가 교육정책에 있어 공·사학간의 재정 형평유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사학인 본교도 재정난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간의 논쟁의 불씨로도 작용되어 왔다.

이에 최근 심각하게 부각되어 가는 '사학재정난 해소방안의 모색'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10월 22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학원 학술제 기간에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학원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숙명여대 이은영 교수와 본교 기획실장 이광재(정경대·신방), 도정일(문리대·영문), 송미섭(사대·교육), 정복근(문리대·물리)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영하(본교박사과정·정치학) 대학원보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인 이은영 교수는 발표에서 한국의 공교육비 투자가 GNP에 대비해 매우 낮음과 교육비와 시설 여건면에서 사학이 국공립보다 열등한 교육을 받고 있음을 통계 수치를 들어 증명하고 국고지원과 세제상의 국·사립의 차별과 물가정책에 기인한 납입금 책정기준, 대부분의 사학법인의 재산이 '저수익성 부동산'임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사학재정의 개선을 이야기했다.

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교육정책 역할이 미흡한 현실과 사학 자체내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확보현황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납입금 책정에 있어 전공 계열별, 학점단위당 차등납입금제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며 사학재단의 수익사업에 감면혜택을 주어 현행 규정과 있는 재단수익금의 80%를 전입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규제조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본교 대부분의 교수들은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뜻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으며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각기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본교 기획실장 이광재 교수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고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 사학자체에서도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기업의 지원, 졸업·입학시 재학생의 기

명하며 동문들의 조건없는 기부금 유치를 권장사항으로 들었다.

송미섭 교수와 함께 대학의 자율화 실현을 우선 전제한 도정일 교수는 사학 여건에 맞게 대학자체가 학생을 뽑을 권리와 안 뽑을 권리가 동시에 있어야 하며 제시된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가능한 쪽으로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국고 지원 확대를 현실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산학협동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에 주력하는 것을 선차적인 임무로 규정짓는 정복근 교수는 정부보다 재학생과 동문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시 했다. 또한 그는 사학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기여입학제와 등록금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임과 인력활동적인 기업들의 의무적 기부금 유치를 의견일치를 본 이 세미나의 참석교수들은 무엇보다도 참석자 중 참관 온 재학생이 국소수익을 증명하듯이 대학인들과 관계부처 행정자들의 사학재정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음을 아쉬워했다.

제시되었던 사학재정난 해소방안에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이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재정난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석자들은 사학담당자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 함양을 위해서 대학가 필요한 공영화하면서 이날 세미나를 끝맺었다.

(오은희 記者)

한국, GNP대비 공교육비 투자율 저조 국고지원확대와 기업기부금 유치 절실

치를 취하고 기업이, 독자가, 동문들의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학교재정 운영사항을 공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현재 1%수준의 국고지원을 국공립의 3분의 1 수준인 약 20%까지 끌어 올리며 기업제도 교육이 경제성장에도 공헌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정원의 2~5%를 순수기부입학과 학과발전에 공헌한 인사의 자녀로 제한하여 입학할 허가해 기부금보다는 공헌도와 학습능력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내놓으며 기여입학제를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이라 꼽았다.

년 기부금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복합적으로 위방안을 실행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학교 실무자로서 학교 구성원들이 각기 일방의 이익만 옹호하는 현실에서 미리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세울 수 없음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작년 학교재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미섭 교수는 89년 본교 재정규모인 3백90억원이 재단전입금 17%, 학생등록금 76%, 기타 7%였음을 보고하면서 재단 사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부실연구소 활성화로 산학협동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분위가 미성숙을 들어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표

과 이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재정난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석자들은 사학담당자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 함양을 위해서 대학가 필요한 공영화하면서 이날 세미나를 끝맺었다.

(오은희 記者)

여성고용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I. 들어가며

한국 산업사회에서 고용문제는 그동안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계속적인 수출주도의 무역경제정책은 고용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80년대 들어 국제분업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고용문제는 또다시 크게 부각되어 진다. 산업구조 합리화로 인한 첨단 산업화의 추진, 사무공정자동화, 한계·사양 산업의 업종전환, 해외이전 등은 산업전선에서 실업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누락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중 특히 여성고용 불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여기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여성고용 문제의 원인과 나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여성 노동의 특수성의 이해 뿐 아니라 전체 한국산업 구조와 사회구조 모순의 인식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II. 여성고용문제의 원인

여성노동은 자본가들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미숙련직에 저임금으로 고용되고 결혼이나 임신을 하면 해고되기도 하며 기혼이라는 이유로 다시 더욱 열악한 조건에 고용되는 여성들은 산업예비군의 전형적 모습이다.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값싸게 공급하고 있는 노동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이

아말로 가장 훌륭한 산업예비군이면서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 강화를 은 뭇을 담당해 온 장본인이다. 그것은 여성노동이 가정내 노동으로써 일차적 규정을 당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노동에 있어 가장 유동적인 존재로 위치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장폐업, 휴업, 공장이전, 외주화, 위장조산으로 인해 여성사업장에서 집단해고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이 해고

에 따른 이직이나 해외투자 등에 따라 자연감입이나 해고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물량은 줄지 않고 감원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노동강도의 강화가 벌어지고 있다. (89년도 고용감소율 29.9%) 한편 크라운 전자, 인천한일 스텔레스, 마산 등지에서의 분규는 여성노동자들이 집단 감입 해고된 사실들을 어느 정도 표출시켰던 사건들이었다.

여성사무직 역시 자동화에 따라 감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용역회사사를 통한 임시고용이 증가하고 파트타임별로 고용이 추진되는 것은 자본세력들이 자신

의 수단을 동원하여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한 노동탄압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폐업의 문제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자계 기업에서 휴·폐업, 집단감입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휴·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을 막고 휴·폐업이 악용되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휴·폐업 혹은 자본철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하여 이들이 고용사무소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과 관련한 행정체계에서 구직자들에게, 대가번호 발부, 직업알선관과의 면담, 컴퓨터로 처리되는 최신 일자리를 리스트, 미취업, 이직, 기술훈련교육기관의 경제적보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시급하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 고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나 기계의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참여와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보장되도록 하며 직장수준에서 고용관리 규제와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V. 나오며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야기된 고용불안과 왜곡된 고용구조, 여성고용차별은 경제정책 자체의 방향전환을 통해서만 시정될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정책이 고용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곁여낸 채 진행될 경우 노동자들의 생활불안정은 더욱 악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절약형, 고용악화형, 자동화, 합리화가 아닌 '고용유치형 산업', 고용수준을 염두에 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향할 것을 권장한다.

독점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해 온 국가정책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적극적인 고용창출과 사회보장, 그리고 고용구조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가 경제구조의 민주적 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구실이 될 것이다.

윤 해 연
(한국여성노동자회 총무)

사회모순에 희생된 산업예비군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실업 가중시켜 '고용보험제' 도입이 실업 불안 해소 관건

되면 '결혼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선전으로 여성고용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I. 여성고용불안정의 현황

주로 여성사업장인 의류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양산업이라는 미명하에 라인 축소, 물량감소 및 폐업 등이 다반사로 행해져 고용이 불안정하고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동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거나 노조탄압의 주요 고리로 작용되고 있다.

관내나 기획은 대기업, 생산은 중소기업의 운영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하청기업이 늘어나고 자연감입과 해고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 도시지역 분업체의 74%가 중소기업임에도 월평균 이직률은 9%에 달한다.

전자산업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자동화와 기술투자, 업종전환

들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무시한 결과이다.

IV. 고용문제의 대응방안

우리나라의 고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현재 전체 노동력의 25%정도가 실업, 혹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고용문제는 일시적 경기변동 보다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국가와 독점자본이 주도해 나가는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에서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정책, 거시정책 및 산업정책을 서로 결합시키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성격의 정책 대안 마련과 함께 실업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철저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종합적 성격의 고

제주도가 '홍콩' 되길 바라는가?



현대문명의 파행적 양태가 사회전반을 잠식해 들어갈수록 인간은 이에 저항이라도 하듯 옛 정취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가지게 된다. 다행이도 한반도에서 이런 감정이 나타나질 수 있는 곳이 아직까지는 적잖이 존재하지만 못사람들은 남단의 제주도를 먼저 떠올린다. 아마 언어학과 민속학의 보고이며 수려한 자연환경에 주민의 반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까닭에 순박함마저 느낄 수 있기 때문일리라.

그러나 요즘 자본주의의 커다란 메카니즘은 이곳마저 내버려 둘 수 없는 모양이다. 제주도는 자체기계의 희소성때문에 지난 89년부터 종합개발계획이 진행돼 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현지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지상정된 상태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수긍 가는 것도 그렇것이 정부당국에서 추진해온 개발계획이란 것들이 주민들의 이익배제에 몰론 생존권까지 앗아가려는 관공·유흥개발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될 움직임이 보이는 특별법도 조항을 살펴보면 천연일출대로 외지 재벌의 제주도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실제 종합개발계획이 계속 진행돼 오면서 제주도 땅의 상당부분은 국유지를 제외하고

외지 재벌의 투기대상이 되었고 (놀라운 일은 선산일출봉의 분화구까지 주인이 있다 한다), 그 땅위에 지어진 건물의 사용 용도 또한 위락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카지노·골프장이 아니라 감귤농사로 성공할 수 있는 농

업설비, 섬에 가장 부족한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수개발일 것이다.

무절제한 개발은 제주도를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보다는 타락의 섬으로 만들어 '제주의 홍풍화'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가리켜 '제2의 4·3'이나 '신판 제주보호조약'이라고 떠돌고 있다.

제주 민중들은 '4·3민중항쟁'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나 토론회장이 아닌 거리로 뛰쳐 나오고 있다. 그들은 삼석에서의 엄청난 자생성을 갖고 거기에 이런 힘을 폭발시킬 수 있는 조직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위정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법제정 추진의 이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제주민중의 진술을 막지는 못할 것이며 만약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지한다면 바로 그 행동이 큰 화를 부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술정보

'반핵평화시민교실' 계속 11월12일까지 한국여성민우회서

반핵평화운동연합 주최로 지난 10월22일 열린 제27기 반핵평화시민교실이 11월12일까지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계속된다.

한반도의 핵문제와 미군 주둔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킬 방법을 모색하기위한

이번 시민교실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7시부터 2시간동안 열린다. '주한미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최순일(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의 강의로 11월 5일에 있고 마지막날에는 '국내외의 경제와 반핵평화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해 참석자 모두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민족문화연구소교육강좌 매주 금·강남출판문화센터서

민족미술학회의는 지난 10월25일부터 12월13일까지 강남출판문

화센터 이벤트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미술교육강좌를 기획한다.

'우리미술을 새롭게 보는 눈'이란 제목의 이번 강좌는 변화된 미술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대응방식을 모색하게된다. '도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기용(건축가)씨의 강의가 11월1일에 있고 11월8일 '자본주의 문화구조와 정치미술'에 대한 엄혁(미술평론가)씨의 강의가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신학철 민족미술작가와의 대담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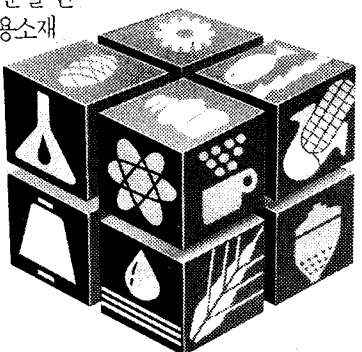
SAM YANG GROUP



강의실에선 칸트의 철학에 심취한다 그러나 수업뒤의 탈출 동아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먼저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젊은이—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개척자 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그룹이 지난 67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정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문에서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속에
내일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취적인 기상처럼 삼양그룹은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삼양사(株, 雪種, 飼料, 水産, 精製化学) ●삼양중공업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양식품주식회사
●삼양화학주식회사 ●신원제분주식회사 ●인원산업(주) ●삼양종합연구소 ●양평화학 ●수원정화학